

국감 총돌에 사정 갈등... 멀어지는 여야 지도부 용산 회동

감사원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민주당 '정치 보복' 반발 양측 '협치모드' 난망...이준석 전 대표-여당 법정 공방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위한 물밑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국감 감사 충돌이 본격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도 본격화하는 국면이어서 당분간 회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지금은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회동 성사까지는 난관이 만만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주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영수 회담'에 부정적이다.

영수라는 단어 자체가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를 겸했던 구시대 잔재라며, 여야 지도부 회동 형식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설사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대일 만

남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더라도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무적 타이밍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 "대통령이 해의 순방을 다녀와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순방 이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키우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마침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용산과 여의도 양측 모두 회동을 추진할 동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 보복' 반발이 맞서면서 협치 무드를 형성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실무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여당의 법정 공방도 변수다.

만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또다시 무력화한다면 당장 여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회동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이사가 마무리되면 여야 인사들을 관저로 초대해 만난 정치를 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상황을 좀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권'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야당 탄압·정치 보복은 국민 배신 행위"

민주당 최고위 회의... "양곡관리법·민영화 방지법 등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정부에 촉구하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데에 골몰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키 어려우나,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한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YTN 지분 매각, 철도·공항 민영화를 예를 들며 "저희가 가장 우려한 보수정권의 DNA라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민영화를 반드시 막기 위해 민영화 방지법, 국유 재산 특혜 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때 국정감사(국감)를 폐지했다"며 "국감을 무력화하는 정부 여당의 폄수도 독재정권을 닮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국감 하루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 대 강 공세를 여당에 주문했다"며 "야당을 비하하는 (방)법까지 지침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감 상황실장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부자 감세를 철회한 영국 사례를 들며 "윤석열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 초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고 여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갑석 "현대산업개발 무책임, 서울시 방관"

국회서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과 주거대책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조오섭 (광주 북구갑) 의원은 5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과 국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방적인 주거지원대책 규탄 및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의 38층 아파트 외벽이 종잇장처럼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후진적인 안전사고였다"고 규정했다.

또 지난 5월, 정몽규 회장이 전면철거 및 재시공, 조속한 주거지원대책을 약속했고, 8월 11일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1000만원씩 무이자 대출에 총 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로 1630억원 등 총 2630억원을 투입, 이는 세대별로는 3억3000여만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상은 '통 큰 지원'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였음이 드러났다"며 "현안의 제안을

입주자 편의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테니 그에 대한 5-6% 이자를 현안에 내리는 여차구니 제안이었다. 이는 이자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금을 현안이 대위변제 하는 조건을 수용하면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받으라는 것이며 중도금 납부액이 줄수록 입주지원배상금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뻔한 계산이다"면서 "이는 90%이상의 계약자가 대위변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철저히 계산한 제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지에 물린 입주예정자들에게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당장 중지하고, 불가항력 상황에 놓인 주민을 상대로 입주지원 배상금 포기각서를 받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주거지원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부양의무기준 폐지해야"

정의당 강은미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가 전체 24.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 부담금 관련해 UN 장애인권리협약 권고대로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의당 강은미(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이 보건의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구가 3만2259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2475가구로 2020년 1057가구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대상 장애인은 13만1975명이지만 실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 수는 6월 기준

으로 10만6643명으로 2만5332명(19.2%)의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0%가까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

2014년 UN장애인권리협약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의복지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제사회가 권고한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가구의 특성 고려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